

# 민통련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전 민통련 대변인 김중철

1944년생 동아루위 위원 민주헌문운동협의회 민주문화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통련이 오늘도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까닭은  
80년대 중반의 민족적 과제들이  
아직도 현실 속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통련이 지향하던 바가 여전히 실천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1. 민통련은 왜 태어났나

돌아보니 벌써 스무해가 지났다. 1985년 3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천주교 분도회 관 강당에서 머리가 허연 노운동기들부터 대학에서 제적당한 학생들, 사회민주화운동이나 노동투쟁을 하다 해직당한 중장년들, 그리고 종교계의 성직자들과 신도들, 문화운동가들까지가 모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창립한 그때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다.

민통련은 1989년 1월 25일 전민련 창립을 위해 발전적 해산을 하기까지 45개월을 살았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만 네 살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사망신고를 한 그 단체의 탄생 스무돌을 맞아 기념행사를 하고 잔치판을 벌리는 까닭

은 민통련이 역사의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현대사 안에서 숨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때 그 사람들’은 왜 민통련을 만들어야 했는가? 그 준비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하나인 나는 전국적 운동조직 건설이 시대의 부름이자 운동가들의 열망이었다고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1980년 서울의 봄과 5월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억누른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최대 위기에 부닥쳤다. 유아무개라는 허수아비 야당 당수를 내세워 민한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선거에 나서게 했지만 민주협을 중심으로 세운 새 야당인 신민당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국내의 김영삼 씨와 김상현 씨, 망명자 신분이나 다름없던 미국의 김대중 씨가 이끈 그 새로운 정치운동은 몇 십년은 버틸듯이 보이던 전두환 정권을 향해 던진 거센 도전장이었다. 공포정치로 철옹성을 쌓은 듯하던 그들의 지배체제에 작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거대한 물결이 성벽을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재야운동 진영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를 비롯한 1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와 개별 운동가들의 조직인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가 바로 그들이었다.

신민당이 주도한 ‘선거혁명’은 재야운동가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초조함 비슷한 것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직업정치인들이 저렇게 극적으로 민중의 힘을 모으고 있는데 순수함과 도덕성과 투지를 생명으로 하다는 재야운동가들이 갈라져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2·12 총선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두 단체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개인적 경험으로 치자면, 그렇게 힘들고 싸증나는 협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분명한 기억은 아니지만 민민협에서 세 명, 국민회의에서 세 명이 대표로 나와서 주로 가톨릭노동사목연구소에서 한번에 짧으면 대여섯 시간, 길면 늦은 밤까지 무제한 토론을 벌였다. 통합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본부는 어디에 둘 것이며…

오랜 산고 끝에 민통련을 창립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이 끝났다. 그런데 창립대회를 이틀 앞둔 3월 27일 오후 ‘지뢰’가 터졌다. 당시 민주화운동의 한 중심축이던 ‘종로5가’(기독교 사회운동권의 속칭)와 83년 9월 그 엄혹한 군사독재에 맞서서 잠자던 재야운동을 흔들 어 깨운 바 있는 민청련이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민청련은 그 뒤 85년 9월에 민통련에 가입). 사실 그 두 세력이 빠진다면 재야운동의 전국조직은 전방 공격수와 지원세력이 빠진 불

구가 될 처지였다. 그러나 그들의 불참 동기가 어쨌든 민통련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항의 뜻을 올렸다.

## 2. 6·10 항쟁의 감격과 87년 대선의 분열

85년 10월 17일, '고문용공조작저지대책위원회' 결성을 계기로 민통련과 민주협, 신민당과 종교계가 군사정권을 끝내기 위한 초보적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전두환 군사정권 쪽이 슬금슬금 '호헌'이라는 풍선을 띄우면서 장기집권을 기도하자, 민주화운동 진영이 '개헌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해 11월 20일 민통련이 만든 '민주헌법쟁취위원회'는 신민당 조직과 더불어 이른바 '호헌'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그 절정은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펼쳐진 대규모 집회와 시위였다. 그것은 80년 5월 18일의 민중항쟁 이래 가장 격렬한 반군사독재 투쟁으로서 87년 6월항쟁의 발파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면전은 민통련이라는 조직으로서는 지도부의 투옥 또는 수배와 구성원들의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결단이었다. 문익환, 이창복, 이부영, 장기표, 임채정을 비롯한 집행부가 투옥되었고 지방 조직에서도 구속이나 수배를 당한 사람이 줄을 이었다. 나는 한해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87년 6·10 대회 닷새 전에 경찰에 잡혀 9월 중순에 감옥을 나왔다.

당시 서대문에 있던 서울구치소 안에서 노태우의 '6·29 선언'을 들었는데, 민주세력 다수가 기만적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전두환의 퇴진과 대통령 직선은 불가피한 정치일정이 되어버렸다. 6월항쟁 여러 달 전부터 감옥은 사상 최다의 정치범 수용을 기록할 정도였다. 온종일 '통방'의 주제는 대선과 후보단일화 아니면 민중후보론이나 선거 보이콧 같은 것이었다. 면회 오는 변호사들도 벌써 김영삼이 좋겠다느니 김대중이 낫다느니,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패라느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출감 이틀 뒤인 9월 16일 대전 가톨릭농민회 본부에서 열린 민통련 중앙집행위 모임에 인사를 하러 들렀다. 바깥 사정을 잘 모르는 터라 인사만 하고 서울로 돌아오려는데, 한 지방조직 간부가 '김대중지지'를 제안했다. 나는 아연실색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놀랐다.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단일화논의가 한창인데 민통련이 어느 한쪽 지지를 선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논쟁이 이어졌다. 민통련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4개 가맹단체들이 자체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계속되었다. 나는 민문협 공동대표 자격으로 민통련에 파견 나가서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김대중지지’와 ‘독자민중후보론’으로 갈린 민문협 실행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작업에도 참여해야 했다.

10월 5일 민통련 사무실에서 ‘민주당 김영삼 총재, 김대중 고문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민통련 간부들이 차례로 나서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민족, 통일 등 11개 항목에 관한 질의를 했다. 김 총재가 오전, 김 고문이 오후였는데, 결과는 후자의 우세로 나타났다. 결국 그 전부터 일었던 김대중 대세론이 민통련의 방침으로 굳어져간 끝에 10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24개 가맹단체 대표들의 표결이 있었다. ‘김대중 비판적 지지 17표, 기권 7표’였던가, 정확한 기록은 확인해봐야 알겠다. 그 표결 직후 벌어진 부의장 두 분과 한 중앙위원의 항의퇴장은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가 결의한 이상 민통련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12월 15일 대선 결과는 노태우 당선, 김영삼 후보 2위, 김대중 후보 3위로 나타났다. 민통련 김병곤 정책실 차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구로구청부정투표 항의농성 같은 처절한 저항이 제도언론의 목살로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은채 노태우 당선은 현실로 굳어졌다. 그 뒤 민통련에 퍼부어진 비난의 요지는 ‘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특정후보 지지로 망쳐버렸다.’는 것이었다. 문익환 의장은 3주간의 ‘참회 단식’에 들어가고, 집행부는 공황 상태였다.

198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야세력의 정치 참여 논의가 활발하던 때, 제도정치권으로 갈 의사가 없던 내가 그 논의의 실무책임자를 맡았다. 민통련 간부들뿐 아니라 ‘김대중 비판적지지’를 반대한 운동가들 중에도 지망자가 많았다. 재야운동권 대다수의 견해를 들어보니, 정치적 지향과 당선 가능성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운동가들이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을 택했고,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에 들어간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한겨레당과 민중의 당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총선에 나섰다. 열명이 훨씬 넘는 민통련 출신이 평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고, 넓게 보면 재야 출신인 노무현 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그 무렵을 전후해 출감한 ‘옛 동지들’이 ‘아무개한테 재야운동을 팔아넘긴 민통련을 해체하라’는 뜻의 유인물을 사무실에 뿌리는 것을 보고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마침 나는 그때 정치권으로 간 분의 뒤를 이어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가장 가깝게 지내던 출감인사에게 대화를 통해, 민통련이 대

선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들려주려 해도 말을 나눌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데야 누구를 탓할까?

결국 나는 88년 5월 15일에 창간된 한겨레신문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찬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민통련의 선배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축스럽기 짝이 없었으나 어쨌든 나는 떠났다.

### 3. 오늘 민통련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역사 속에 민통련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비록 그 이름은 활동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민주화, 민중해방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민통련의 정신과 이념이 발전적으로 역사를 밀고 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확신에 대해서는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87년 대선에서 민통련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민주세력의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서 노태우를 낙선시키고 단일후보의 승리를 쟁취하는 데 앞장섰다면 민간정부의 탈을 쓴 군사정권은 단숨에 끝났을 것 아닌가? 87년 대선 직전과 직후에 일부 재야인사들과 시민들은 김대중 씨가 김영삼 씨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거나 나무랐다. 그러나 철저한 직업정치인인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서 양보를 이끌어낼 힘이나 능력을 가진 조직이나 세력은 그 당시 있을 수 없었다고 본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양 김씨는 각각 92년과 97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그들의 공과에 관해서는 평가를 내리기에 좋은 자료들이 수두룩하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가를 비교하는 일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두 김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민족문제 해결에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민생과 경제에 관한 평가는 크게 다를 수 있겠지만.

민통련이 오늘도 살아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까닭은 80년대 중반의 민족적 과제들이 아직도 현실 속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통련이 지향하던 바가 여전히 실천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민통련의 주체를 이루던 간부나 지역운동협의회 출신들이 정치에 대대적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이끌고 있다.

나는 직업정치인이 된 과거의 민통련 동지들이 성심성의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써주

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만 해도 수십명에 이르는 그들이 일관되게 단합된 자세를 보이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일하는 동지들은 그 분야에서 힘을 모으는 데 전보다 더 노력하고, 사회 여러 부문에서 활동하는 동지들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주화의 완성과 통일을 향해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